

당정, 명태균 ‘폭로의 늪’서 허우적… 친윤-친한 갈등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친윤 “한동훈, 선거 결과 책임 회피
김 여사 문제 통해 덮으려는 생각”

친한 “대통령실 해명, 설득력 미미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해결 안 돼”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싸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

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불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다.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

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예스아이엔디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해경 씨, 김 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중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운영위,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의결

명태균·김대남 등 33명 증인 채택
특별추천위 구성 등 개정규칙안 회부
국민의힘, 野 일방적 처리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

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해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펠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

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준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

회 증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된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한길 “문학번역원 설립 때 ‘노벨문학상 받을 날 올 거다’ 말해”

(국민통합위원장)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3개 분야 중심 정책과제 도출 계획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16일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인젠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며 국민통합위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는 소규모 기업과 비정규직, 무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일자리 격차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날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약자 보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인이나 소설가인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이 문화부 장관이던 시절,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을 주도했던 일화를 꺼냈다.

24년전 문화부 장관에 재직하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기부금(9846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43만원을 ‘한국문학번역금고’에 기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 문학번역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기탁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됐다. 당시 한국 문학 작품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문학 번역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반이 미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며 “저는 남달리 더욱 그렇다”며 감회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으면 우리가 다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불법 과다청약, ‘내 집 마련 꿈’ 앓아가”

청약시장에 부동산 투기꾼 몰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를 차지했다.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한 달에 3.2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년에는 269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앓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